“문 잠그고 몰래 손님 받아요”…단속 비웃는 심야영업

광주 유흥업소 영업 강행 철회 불구 일부서 호객행위 극성
간판 점등도 지속…방역지침 혼선 속 당국, 조정 방안 강구

“문 잠그고 몰래 손님 받고 있습니다. 입·출구가 3곳이나 있어 절대 단속에 안 걸립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강력 반발하던 광주 유흥업소들이 영업 강행을 철회했으나 일부 업소들이 법망을 피해 꼼수 영업을 벌이고 있어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단속에도 불구, 유흥가 주변에서 업소 출입을 권하는 ‘호객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등 방역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19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문을 닫은 채 간판 불만 켜놓는 ‘점등 시위’를 시작으로 전날부터 저녁 영업 강행을 예고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전날 밤 11시 광주 최대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는 일명 ‘삐끼’로 불리는 호객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들은 이곳을 지나던 남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했고, 길을 묻는 척 다가와 유흥업소 출입을 권하는 등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당일 방역당국에서 단속·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무색하게도,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망에 걸리지 않는다며 유흥업소 출입을 부추기고 있었다.

한 호객꾼은 “노래는 제한되지만, 문을 잠그고 영업하면 된다. 입·출입구가 세 개여서 단속이 들어와도 도망 나가면 된다”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산구 첨단지구 인근에는 ‘유흥(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단란주점·콜라텍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 조치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유흥주점 등 업소 10여곳 이상에서 간판 불이 켜져 있었고, 일부 유흥업소는 영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거리에는 술에 취한 청년들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대리기사 등이 눈에 띄었고, 유흥업소로 들어가려는 취객의 모습도 포착됐다.

유흥업소 이용 시 마스크 착용, QR코드 체크인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법망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은 ‘n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단속전담반 구성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시민 윤모(31)씨는 “며칠 전부터 지역 유흥업소가 방역지침에 반발해 간판 점등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오늘은 영업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업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침을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단속을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방역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과태료 처분’이라는 경고성 재난 문자를 공지하고, 경찰과 지자체는 문을 연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단속 전 유흥주점 업주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설득해 나섰고, 결국 방역 수칙 조정 등 방안을 찾아보기로 약속했다.

이에 업주들도 영업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31일까지 방역 지침을 따르는 반면, 간판 ‘점등 시위’는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손님도 없고, 지속적인 단속·점검에 실익 여부를 따지다보니 영업 강행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확산세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영업 재개 조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꼼수 영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흥업소는 장기간 집합금지 대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요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지역 식당·주점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신고는 총 341건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기자·조태훈 수습기자

‘5·18 진실’ 알린 故정형달 신부 장례미사 엄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선 정형달 바오로 신부가 향년 7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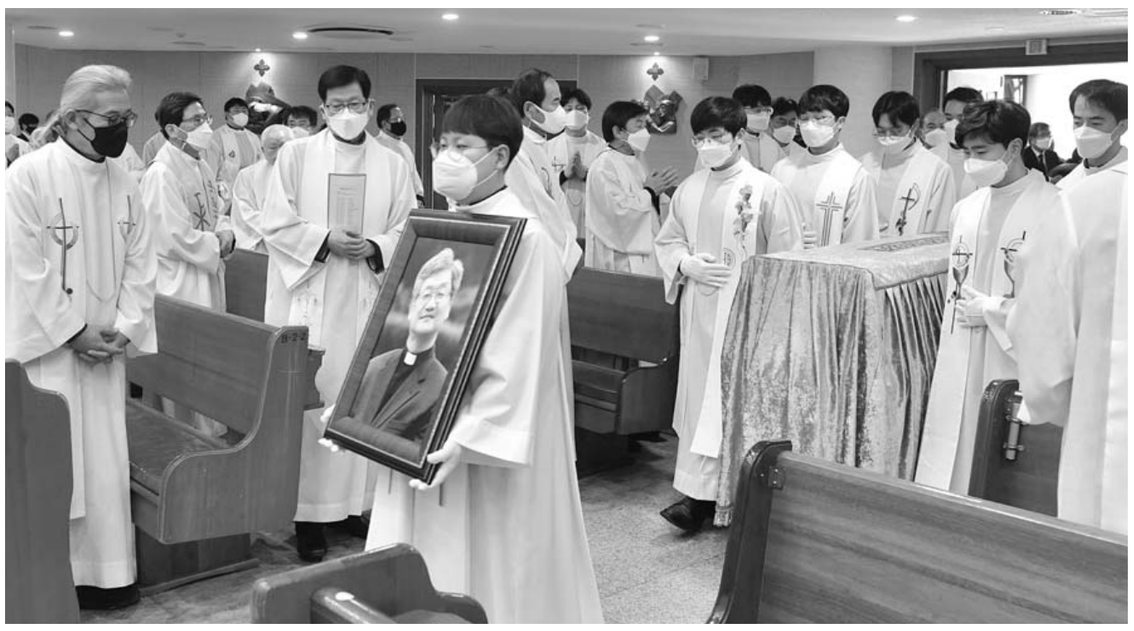
19일 광주 서구 염주동성당에서 열린 정 신부의 장례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교구 사제와 유가족 등만 참석했다.

일반 신도들을 위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됐다.

정 신부의 인자한 미소가 담긴 대형 영정 사진과 관이 성당으로 입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례미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김희중 대주교는 “고인과 함께했던 시간이 생생한데 여기에 말없이 누워 계시니 황망하다”며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신부들에게 연차와 상관없이 격의 없게 대해주고 각별히 챙겨주셨다”며 “자기 삶의 가치를 아름답게 남기고자 노력하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다”고 기억했다.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고(故)정형달 바오로 신부 장례미사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선종한 고인은 1969년 사제품을 받아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애리 기자

한편, 정 신부는 지난 16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그는 1943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1969년 사제품을 받았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과 해남본당, 용당동본당, 옥암동본당 주임 신부 등을 지냈고, 2011년 은퇴했다.

정 신부는 계엄군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1980년 6월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리고자 낸 ‘광주사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5·18의 원인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 성명은 전국 모든 천주교구에 전달돼 5·18의 진실을 알리는 자료가 됐다.

그는 이 일로 당국에 연행돼 심한 고초를 겪었으나 이후로도 5·18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위해 노력했다.

1985년 교구 정평위원장 때에는 5·18 관련 천주교회의 활동을 책으로 엮은 ‘광주의거자료집’을 펴내기도 했다.

고인은 장례미사를 마지막으로 전남 담양군 천주교 공원묘지에 영면했다. /김동수 기자

음주단속 피해 도주한 경찰관 ‘측정거부’ 혐의로 송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쳤다가 10시간 만에 출석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A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음주측정불응죄’이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30분께 차를 몰고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를 달리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10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왔다.

경찰은 A 경위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 여부가 관심을 받았으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대신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부분에 대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했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북부경찰서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성을 위해 A씨의 소속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광산경찰서는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의 법률 해석을 거쳐 음주측정불응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 경위가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 고지가 간접적이나마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말 모임 취소를 권유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A 경위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된 상태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훈석 기자

호남 택배노조 ‘과로사 대책 요구’ 총파업 예고

택배노조가 택배회사에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19일 오전 광주 남구 CJ대한통운 송암터미널 앞에서 택배노동자 총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사회적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설 명절 특수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한 해만 1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정부와 택배사까지 나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택배현장은 바뀐 게 없다. 분류작업 인원들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태훈 수습기자

칭다오 지진에…“침대가 흔들”

띄엄띄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밤 중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19일 새벽 오전 3시21분께 중국 칭다오 동쪽 332㎞ 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에 전남·북 내륙과 가까운 서해안에서도 문의와 신고가 잇따랐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한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영향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규모가 큰 만큼 한반도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외 지진은 규모 5.5 이상인 경우 지진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 /최명진 기자

CMYK